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사진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金炯完 : 723-5302)
제 목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름판 벌인 국회의원 고발의 건
날 짜 1998. 4. 20. (총 10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름판 벌인 국회의원 검찰에 고발

1998. 4. 20.(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朴贊郁 서울대 정치학 교수)는 4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 지방검찰청에 지난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스톱 등 노름판을 벌인 국회의원들을 고발한다. 대표 고발인은 金炯完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이며 참여연대 100인유권자위원회의 윤수경위원 외 4인이 함께 고발인으로 서명하였다.
2.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스톱 등 노름판을 벌인 국회의원들과 관련하여 이미 지난 3월 12일 김수한 국회의장에게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진상조사를 위한 즉각적인 윤리위원회의 소집과 징계를 촉구하는 한편, 조순 한나라당 총재에게도 항의서한을 발송하여 해당의원의 명단공개, 제명 및 출당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또한 3월 16일에는 '노름판을 벌인 국회의원의 자진사퇴 및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20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다 할 조치는 커녕, 어떻게 하겠다는 회신조차 없는 실정이다.
3.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는 노름판을 벌인 국회의원들이 누구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그동안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2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대부분의 중앙일간지와 유력주간지 관련기사 등을 망라하여 조회하고, 여기에 접수된 제보의 내용을 종합하여 비교, 검토함으로써 교차확인 작업을 하였다. 이를 토대로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다.

4. 우리 사회 고위층이 연루된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될 때 대부분 익명으로 처리됨으로서 결국 관련자 및 사건의 실체를 흐리게 하고, 나아가 사건의 처리를 호지부지 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이번 국회의원 노름판사건도 관련자 전원이 예외 없이 익명으로 처리되어 진상의 규명을 원천적으로 방해하였다. 우리의 노력은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5. 우리는 검찰이 우리가 제출한 고발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상의 특권을 이유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사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성실하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문제의원들을 그대로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더욱 없는 것이라고 본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결국 대다수 성실한 국회의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감을 주는 것이며 국회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허무는 일이 될 것이다.

끝.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